

자원순환

, 재활용

, 생활폐기물

, 산업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 , 농축수산 폐기물

13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정식 출범, 업계 권익보호 최선

산업폐기물매립업계 구심점 마련됐다

박영복 기자 eco@ecomedia.co.kr | 2014-06-16 19:24:20



△ 민간 매립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가 이민석 코엔텍 대표이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며 정식출범했다.

국내 민간 매립업체들의 권익보호와 대정부 소통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가 정식 으로 출범했다.

지난 3월 임의단체인 협의회로 운영되던 민간 매립업계 모임을 법인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산업폐기물 매립협회'는 13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우리벤처타운에서 회원사 대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 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협회는 이 날 현판식과 함께 이민석 (주)코엔텍 대표이사를 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민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활용과 재사용 정책기조도 좋지만 무리한 자원순환정책은 폐기물의 부

적정 처리를 양산하는 편법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매립시설의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된 사후관리 부지이용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매립업계가 단순한 폐기물 처분업이 아닌 국가 중요 기간시설과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매립기술 표준화, 매립지 수명연장, 매립지 재활용 연구 및 사후관리 활성화, 대정부 업무지원 및 업계 관리의 효율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정책 수립 시 매립업계 입장을 대변하여 매립 관련 환경보호와 업계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매립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 연장 등 관련규제 강화는 물론 사후관리부지의 이용 제한과 매립부담금 제도 도입,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 납부기준 강화, 폐석산을 이용한 폐기물 매립허용 검토 등으로 폐기물 처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업계의 존립기반을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향후 적절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복 기자 eco@ecomedia.co.kr]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저작권자 © 환경미디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ecomedia.co.kr]